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2015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김 건 홍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윤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Proposal:
Focused on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김 건 홍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윤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Proposal:
Focused on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위 논문을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김 건 홍

김건홍의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김 건 홍

한국의 역사는 ‘동맹의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주변국의 안보위협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하여 왔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 역시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 민주화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제 부상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에 따른 위협의 인식 변화 등은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

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예고하는 시발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외교·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21세기의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미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약소국의 자의에 의한 자주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과의 동맹이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안보비용을 부담하고 안보의 자주성에 제한을 받는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의 비대칭성은 상호간의 시각차를 발생하게 하고,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보는 시각을 동맹의 딜레마와 자주성 문제 등 약소국의 불평등에 주안을 두는 관점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원리에 대응하는 수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이익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으로는 적절히 얇은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자의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약소국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성 공유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 양국의 군사·외교·경제 등 다각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

【주요어】 한미동맹 공동비전, 포괄적 전략동맹, 호혜성, 안보의 딜레마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동맹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변화요인	4
1. 동맹의 일반적 개념	4
2. 동맹의 유형과 변화요인	9
제2절 국제관계와 약소국 동맹의 이론적 고찰	13
1. 약소국 안보와 동맹의 선택	13
2. 강대국과 약소국의 시각차 고찰	18
제3장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분석	21
제1절 한미동맹의 형성과정과 특성 고찰	21
1. 한미동맹의 형성배경	21
2. 한미동맹의 특성 평가	23
제2절 한미 상호방위조약 : 한미 군사동맹	26
1.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시대별 발전과정	26
2.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성과와 요인	31

제3절 한미동맹 공동비전 : 포괄적 전략동맹	34
1.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	34
2.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평가	37
 제4장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방안	 39
제1절 21세기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39
1.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전략	39
2.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43
제2절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제언	46
1. 국민의 지지확보	46
2.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구체화방안 모색	47
3. 한미동맹의 범위와 지역확대	49
4. 이윤창출 중심의 동맹관계 개선	50
5. 한국의 자율성 증진	51
 제5장 결 론	 52
 참고문헌	 54
 ABSTRACT	 5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화 등 국가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공적인 국가안보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고, 동북아의 지역안정과 세력균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 소련 봉쇄정책과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군사동맹이었으며, 이러한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개념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 증대 등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 요인과 안보위협 인식변화 등에 따라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표명하면서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환기를 맞이한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이 앞으로도 한국의 국가이익과 발전에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 “지속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현시대의 화두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 연구와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해 동맹이론의 고찰과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논지를 정리하였다.

첫째, 한미동맹의 형성배경과 한미동맹의 특성을 평가해 보고,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 미국을 동맹국으로 선택한 요인을 규명해 본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안보와 자주성 교환이론 등 동맹의 딜레마 문제, 강대국 중심의 동맹이론 발전으로 인한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에 대한 시각차 발생 등 약소국 입장에서 국가안보전략으로서 동맹을 선택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한미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동맹관계를 보듯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약소국의 자의에 의한 자주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도 약소국의 비대칭적 동맹의 자주성, 자율성 확대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이나 약소국 동맹론 등 약소국의 자주적 동맹형성에 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소국의 안보와 동맹의 선택, 강대국과 약소국의 시각차 등을 고찰하여 약소국 입장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맹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동맹의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하였다.

특히,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동맹에 관한 연구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질서 측면에서 발전되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약소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보는 시각이 강대국 보다 현실적이고 국가생존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존의 동맹이론의 문제점 제시에만 그쳐 약소국의 국가전략으로서의 동맹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성공적인 동맹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동맹 연구는 약소국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와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의 시대별 발전과정과 동맹의 변화요인을 분석해 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성과와 한미동맹 공동비전 체결의 의미와 비전을 검토해 본

다. 한미동맹은 현재 한국의 비약적인 국가발전에 순기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동맹이 연구된 이래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순기능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국가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본다. 한미동맹 공동비전 발표 이후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과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로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21세기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증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연구과제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던 한미동맹이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공식적 한미동맹 조약의 특징적 내용과 변화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론서와 연구논문, 한미동맹에 대한 사례연구와 분석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서, 각종 국내·외 학술저널지 등을 활용하는 문헌적 분석방법과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추가하는 형태로 논지를 전개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제시된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동맹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동맹의 일반적인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국제관계와 약소국 동맹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의 형성배경과 특성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시대별 발전과정을 검토하되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군사동맹의 변화과정과 2009년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분석 평가하여, 제4장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본다.

제2장 동맹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동맹의 일반적 개념과 변화요인

1) 동맹의 일반적 개념

동맹이라는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월퍼스(Arnold Wolfers)는 ‘동맹은 2개 이상 주권국가 사이의 상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정의하였고, 홀스티(Ole R. Holsti)의 경우 동맹을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공동협조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식적 합의’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오스굿(Robert E. Osgood)은 ‘형식적인 조문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협력을 토대로 하면서 서명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무에 대한 상호 신뢰감을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잠재적인 전쟁공동체’라고 부른다. 월트(Stephen M. Walt)는 ‘두 개나 그 이상 주권국가 사이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비공식 관계’라고 하며 국제체계의 현실적인 협조관계로 인식하고 있다.¹⁾

국제정치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고전 현실주의의 선구자인 미국의 정치학자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동맹을 “여러 국가로 구성된 체제 안에서 작용하는 세력 균형이 담당하는 필요한 기능”²⁾으로 정의하였다. 즉, 세력균형의 한 방법으로 동맹을 보았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그의 저서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에서 여러국가의 권력욕은 반드시 세력균형이라는 상태를 낳고 그것을 유지·보존하려는 정책을 낳는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방법을 분할·통치, 보상, 군비, 동맹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

“분할·통치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 상대국을 분할하거나 분할된 상태에 둠으

1) 김장흠, (2007), “한미동맹의 시대적 변천과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5~6.

2) 한스 모겐소, 이호재·엄태암 역, (2014), 『국가간의 정치 1』, 경기: 김영사, p.438.

3) 상계서, pp. 432~438.

로써 약화시키려 하거나 약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 오늘날 이런 종류의 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례는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외교정책, 서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소련의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17세기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프랑스는 독일 제국이 수많은 작은 독립된 약소국들이 분할되어 있도록 하거나, 그런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그들 간의 연합을 방지하는 것을 불변의 외교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이와 비슷하게 소련은 20세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통일을 위한 모든 계획에 계속 반대해 왔다. 분열된 유럽 각국의 힘을 한데 모아 ‘서구 블록’이 형성될 경우 소련의 적에게 소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모아 주리라 생각 한 것이다.

영토적 보상은 18세기와 19세기에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일반적 수단이었다. 한 국가의 영토 획득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혹은 파괴당할 위험에 처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수단이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와서 식민지의 분할 점령과 식민적·준식민적 영향권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이 보상 원칙이 신중하게 적용되었다. 세력균형 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조정이나 영토적, 또는 기타의 여러 조절에는 보상이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체제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반대급부를 얻으리라는 기대도 없이 다른 국가에게 정치적 이익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타협을 놓고 두 국가가 벌이는 외교 협상의 흥정은 보상 원칙이 적용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그 자체는 구조적으로 세력균형과도 연결된다.

한 국가가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수단은 군비다. 상대국의 군비를 따라잡고 능가하기 위해 벌이는 군비 경쟁은 불안정하고 동적인 세력균형의 전형적 수단이다. 이런 군비 경쟁이 낳을 필연적인 결과는 계속 늘어가는 군비 부담이 국가 예산을 점점 더 축내고 끊임없이 불안, 긴장, 공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했기 때문에 상호 경쟁하는 국가들은 그들 간의 균형 있는 적절한 군비 축소를 실시함으로써 영원한 평화는 불가능하더라도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력균형은 고립된 두 국가 사이의 균형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 혹은 동맹과 다른 동맹 사이에서 성립되었다.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적 권력 지위를 유지·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기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타국의 힘을 자국의 힘에 보탬 수도 있으며, 상대방에게 주어진 다른 국가의 힘을 제거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수단을 취할 경우 이는 군비 경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을 택했을 때는 동맹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가 동맹정책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의 문제다. 즉, 선택의 문제다. 동맹의 도움이 없이도 자국 이익을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거나, 동맹 조약의 체결로 인한 부담이 기대되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국가든 동맹을 결성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미국이 역사 대부분의 기간동안 평화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을 체결하기 꺼렸던 사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맹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이 주도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성립하게 되고 그 밖에 수많은 쌍무동맹이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전후에 나타난 새로운 동맹은 과거에 외교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부터 국가의 사활을 구조적이고 영속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국제체제의 하나로까지 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동맹연구도 새삼 부각되었던 것이다.⁴⁾

다시 말해서, 동맹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세력균형의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글로벌화된 현대의 국제사회 안정과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은 동맹국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약 체결로 동맹의 결속력과 지속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 이해관계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정책을 통해 동맹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하는 기본적인 국가안보전략에는 내부의 자원과 힘을 동원한 군비증강정책과 외부의 힘을 활용한 동맹

4) 서주석, (1996),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p.38~39.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자력에 의한 군비증강 및 안보 능력향상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국가들이 안보이익을 생성·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 동맹 체결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국가안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맹은 방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군사적 측면, 구조적으로 안보위협이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략적 측면, 그리고 동맹 상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과 어떤 특정 대외정책에 대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외교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정책인 것이다.⁶⁾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선진 군사력을 가진 동맹 상대국의 억제력과 방어력이라는 안보능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된다. 즉, 동맹국간에 안보인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적대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등 자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동맹은 체결과정에서 동맹국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적대국까지 선택하기 때문에 잠재적 적대국의 평창을 봉쇄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이익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약소국 입장에서 볼 때, 동맹 상대국과 적대국간의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줄어들며, 동맹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할 염려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안보와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약소국 정부의 경우 강대국과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현존 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할 수 있으며, 국내정치가 불안정한 약소국의 경우 이념이 유사한 강대국과 동맹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⁷⁾

5) 김승현,(2009),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6~8.

6) 이석호,(1992), “약소국 외교정책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 p. 465.

7) 김계동,(2000), “한미동맹의 재조명 : 동맹이론의 분석틀로”, 『한반도와 미국-어제, 오늘, 내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p. 11.

넷째, 외교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손상 받지 않고 지위를 유지하는 이점이 존재한다. 국가들이 동맹형성 이전에 각기 특정의 적대국과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맹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이익을 새로이 공유하게 되고,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 이해는 새로운 안보이익을 추가적으로 보유하도록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들 간에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과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갈등적 요소를 완화,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며, 동맹국들이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창출하고 상호간의 정책과 조화시킴으로써 다각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와 같은 동맹에는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도 존재한다.⁹⁾

첫째, 동맹은 적대진영에게 위협을 주게 되므로, 적대국으로 하여금 대항동맹을 결성하도록 자극하여 군비경쟁, 위기상황, 전쟁 발발 등과 같은 안보딜레마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몇몇 국가들만이 동맹을 체결할 경우 중립국인 국가가 적대진영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초래한다는 점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다른 형태의 대안적 동맹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맹에 참여하게 되면 동맹에 같이 참여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참여 국가가 무모한 공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맹 상대국과의 정책적 협력과 공조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행동의 제약이 따르게 되며, 이는 동맹 상대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는 정치적 자주성을 감소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동맹관계에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맹 상대국의 도움이 필요한 안보상황에서 상호 지원하고 도와주기로 한 동맹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강대국이 약소국을 배신하는 포기의 위험성이 있으며, 강대국이 약소국의 지원을 믿고 모험주의적 대

8) 김승현, 전계논문, p. 7.

9) 김계동, 전계서, p. 7.

안을 추구할 경우 자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맹국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연루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동맹은 공격적인 국가에게 공격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더 첨가시켜 주게 된다. 그러므로 팽창을 도모하는 국가는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보다 공격적으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가 자체적 군비증강과 외부세력과의 동맹형성 중에서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이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동맹의 유형과 변화요인

국가 간에 체결된 동맹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들은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의 상호간 의무와 지원의 측면, 동맹구성국의 국력차이와 동맹공약 수행 정도, 동맹의 군사전략적 목적, 동맹체결의 형식 등이 있으며, 각 기준에 따른 분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의 상호간 의무와 지원의 측면에서 분류하면 동맹의 종류에는 편무적, 쌍무적, 다자적인 동맹이 있다. 편무적 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강대국은 약소국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보장을 절대적으로 수혜 받는 동맹관계가 편무적 동맹이다. 이에 비하여 쌍무적 동맹과 다자적 동맹은 국가 상호간에 안보지원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편무적 동맹과 구별된다. 쌍무적 동맹은 동맹을 결성한 두 개의 국가가, 다자적 동맹은 셋 이상의 동맹 참여 국가들이 동맹 상대국에 대하여 서로 안보지원의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혜택을 받는다.

둘째, 동맹을 구성하는 국가의 능력과 힘의 관계, 동맹공약의 수행 정도에 따라 대칭적·수평적 동맹과 비대칭적·불균형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칭적·수평적 동맹은 비슷한 국력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형성하는 동맹으로 상호적이고, 공평한 의무와 기대를 갖게 되는 반면, 비대칭적·불균형 동맹은 국력

10) 이선민, (2007),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1~23.

의 격차가 큰 강대국과 약소국이 형성하는 동맹으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의무와 기대를 가지게 된다.

셋째, 동맹의 군사전략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공격동맹과 방어동맹으로 나눌 수 있다. 공격동맹은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국제정치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공세적 목적을 가지며, 방어동맹은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격동맹의 대표적 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일본 및 이탈리아와 맺은 3국 동맹이며, 방어동맹의 대표적 예는 NATO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격목적의 동맹도 방어동맹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이 전술적으로 공격을 먼저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격동맹과 방어동맹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넷째, 동맹참여국들이 동맹을 체결하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공식동맹과 비공식동맹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동맹은 동맹 참가자가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동맹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비공식동맹은 공식조약 없이 동맹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비공식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이다. 이들 간에는 공식적인 동맹조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양국 간의 안보공약은 매우 탄탄하다.

또한, 동맹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동맹의 효용성이나 지속성이 달라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동맹의 응집성, 동맹참가국의 동질성, 동맹이익의 호혜성, 동맹의무 이행의 신뢰성, 동맹유지의 딜레마 등이 있다.¹¹⁾

먼저, 동맹의 응집성이란 동맹 참가국들이 동맹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동맹의 응집성은 태도적 부분과 행태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자가 동맹 참가국들이 동맹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국가를 대상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는 정도를 뜻한다면, 후자는 동맹 참가국이 다른 동맹국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갈등은 억제하는 실제행동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동맹 참가국의 동질성은 동맹국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경우 동맹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질적인 동맹국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촉진

11) 페터 가이스, 김승렬 역, (2008),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서울: 휴머니스트, p. 252.

진될 수 있고 상호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적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동맹이익의 호혜성이다. 동맹이익은 동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편익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동맹이익이 참가국들에게 호혜성을 보여주게 될 경우 참가국들의 동맹지속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준다는 것이다.

넷째, 동맹의무 이행의 신뢰성은 동맹이 체결되었지만 동맹의무 준수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하면 필요한 상호 군사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동맹의 실효성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동맹이 유명무실해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신뢰성이 강한 동맹의 경우 필요한 군사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유지의 딜레마이다. 동맹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맹에 참가하는 이유는 안보자원의 공유와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관계 속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이 제공해 주는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자국의 국가정책상의 자주성을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보와 자율성이 교환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동맹이 체결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대내외의 안보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동맹 그 자체에 대한 당사국들의 재평가로 인하여 변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동맹의 변화요인으로서 동맹의 대외환경 요인, 동맹국-적성국 요인, 동맹국 내부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¹²⁾

먼저,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환경 요인으로는 세계적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으며, 세계적 요인으로는 패권체제인가, 양극체제인가, 다극체제인가가 동맹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로써 미국은 1970년대에 소련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시대의 종식 그리고 2000년대 9.11테러를 계기로 새로운 안보정책 변화 등의 요인으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시도하였던 것과 같다. 지역적 요

12) 강신곤, (2013), “동맹의 진화요인 분석”,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2~13.

인으로는 동맹이 주여 관심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세의 안정과 불안정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둘째, 동맹국과 적성국의 관계도 항상 고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동맹국과 적성국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거나 혹은 악화되는 경우는 물론, 일부 동맹국과 적성국의 관계는 개선되는 반면에 다른 동맹국과 적성국의 관계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맹국 간의 상호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동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 나아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동맹 그 자체를 보는 동맹국의 인식 변화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동맹국 내부요인으로는 개별 동맹국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아가 동맹에 대한 매스컴이나 국민들의 평가나 여론이 어떠한가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내적 요인들은 동맹의 목표 및 이익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맹관계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가의 내부 정치상황은 그 국가의 대외 동맹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국가의 정치체제, 집권세력의 정치성향,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대외 동맹정책 관련 부서의 상호관계, 주요 정책결정자들이나 관료들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국내정치의 안정 혹은 불안정 등이 동맹의 지속과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편무적동맹, 비대칭적·불균형동맹, 세력균형 유지 목적의 방어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공식동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의 변화, 위협 인식의 변화와 상호관계 등 내·외부 변화요인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본연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3) 오승구 외, (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 287.

14)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하영선 외, (2012), 『세계정치론』, 서울: 을류문화사, p. 525.

제2절 국제관계와 약소국 동맹의 이론적 고찰

1) 약소국 안보와 동맹의 선택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동맹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리스카(George Liska)가 ‘동맹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¹⁵⁾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국제관계에서 동맹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동맹에 관한 개념과 연구들이 연구의 범위 면에서 전세계를 범주에 두고, 국제질서 속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을 중심으로만 연구가 발전되어 사실상 한미동맹과 같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 인해 파생되는 비대칭성과 자주성 문제 등의 동맹의 딜레마, 또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 차이로 인한 동맹을 보는 시각차와 동맹목적의 상이, 환경변화에 대한 동맹 지속에 대한 불신 등 약소국의 안보와 동맹의 선택 등의 기존 연구들은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고 하며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국가는 평등하지가 않다. 인구, 자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영토의 크기뿐 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적 유산, 정치적 지도력 등을 볼 때 모든 국가들의 능력은 서로 다르다. 국제체계는 평등의 이념보다는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능력을 반영하여 이루어졌고 유지되어 왔다. 즉 국제정치의 역사는 불평등의 역사이다. 레이몽(Raymond Aron)에 따르면 국제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폭력의 정당한 독점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무정부적 이고, 권리란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의미는 국제사회가 본질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이기 때문에 힘있는 소수 국가들에 의해 항상 지배되어 왔다는 것이다.¹⁶⁾

또한, 동맹의 연구대상에서도 한미동맹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위협의 억지, 조기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 등 국가의 생존전략으

15) George Liska, (1962),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p. 3.

16) 이석호, 전게서, pp. 511~512.

로 보는 반면, 미국은 대소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동맹, 안보환경의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한 동맹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보는 큰 시각차가 있음에도 동맹에 관한 약소국의 영향력과 역할 등은 국제체계의 질서와 변화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제체계에서 개별국가가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약소국을 정의하고 하고 있다. 강대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범위가 전세계적이므로 이를 위한 영향력도 전세계에 미칠 것이며, 약소국의 이해영역과 영향력은 이에 비하여 매우 제한되어 있다. 코헤인(Keohane)은 체계적 역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4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로 국제체계의 질서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 결정적’ 국가들, 둘째로 개별적 행동이나 다자간 행동을 통해 국제체계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 셋째로 단독행동으로 국제체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 동맹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체계에 효과적 자극을 주는 ‘체계에 효과적 자극을 주는’ 국가들, 넷째로는 국제체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체계에 영향을 못주는’ 국가들이다. 즉, 약소국은 국제체계의 질서와 변화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¹⁷⁾

하지만, 강대국도 국제관계와 안보전략,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제관계 속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전략으로서 약소국과의 동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약소국과의 동맹의 형성이 전략목표 달성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동맹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동맹관계와의 협력은 국가 안보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소국의 동맹의 선택은 국가 생존전략으로서 강대국 보다 더 신중히 동맹에 관한 연구와 정책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약소국의 외교정책에서 국가 간의 동맹이란 방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군사적 측면, 타 국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 어떤 특정 대외정책에 대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외교적 측면, 세력 분포 상태가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7) 상계서, p. 521.

대전략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유익한 외교정책이다. 이외에 동맹국들이 공동 이익과 공동 목표를 발견하고 상호간의 정책을 조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측도 가능하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이 약소국들에게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며 약소국에게는 동맹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이다.¹⁸⁾

로스스타인에 의하면 “약소국에게는 선택 가능한 3가지 형태의 동맹이 있다. 첫째는 특정 강대국과의 양자간 동맹, 둘째는 약소국들 간의 동맹, 셋째는 다수의 강대국과 약소국이 혼합된 동맹이며, 그리고 약소국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맹형태는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이 혼합된 동맹이며 그 다음이 약소국들만의 동맹이며, 마지막으로 1개 강대국과 1개 약소국의 양자간 동맹은 다른 대안이 없고, 급박한 공격위험을 느낄 때만 선택해야한다”¹⁹⁾고 한다. 역사적으로 약소국들은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강대국과 동맹을 추구하였고, 강대국은 약소국에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이 포함되는 다자간의 동맹보다 약소국과 양자간의 동맹을 선호한다고 한다.

다수의 약소국들이 모인 ‘약소국간의 동맹’은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는 별 가치가 없으며, 단지 강대국들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든가, 또는 협상능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²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강대국과의 양자동맹은 약소국에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강대국과 약소국이 갖고 있는 세력균형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약소국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균형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반면에 강대국은 세계 전체의 세력균형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때 지역균형과 세계 전체의 세력균형이 항상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약소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 경쟁관계를 벗어나 타협과 협조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 약소국의 안보는 결코

18) 이석호, 전계서, pp. 531~532.

19) Rovert L. Rothstein, (1968), *Alliances and Small Pow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23~231.

20) 이석호, 전계서, p. 533.

보장될 수 없다. 셋째, 강대국은 약소국과의 동맹에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적용시켜,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넷째,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공동정책의 추구를 위한 협의권을 강조하고, 강대국은 물질적 기여를 강조한다. 다섯째, 강대국과의 동맹에서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약소국이 위성국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²¹⁾

또한, 월트는 동맹을 맺는 주요이유 중의 하나로 위협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위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총체적 힘(Aggregate Power)과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 Proximity), 공격적 능력(Offensive Power), 공격적 의도(Aggressive Intentions) 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²²⁾ 즉, 같은 상황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이 더 큰 나라일수록 상대국에게 더욱 큰 위협 인식을 주며, 국가 간의 지리적 위치가 가까울수록 위협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공격적 능력과 공격적 의도는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동맹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의 위협 인식은 동맹 상대국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약소국은 위기상황에서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취약하며 힘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 다른 국가의 정책방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²³⁾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국내적인 사회정치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이나 약속에 의해 결정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이러한 힘의 차이에 의존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텔(Michael Handel)은 “강대국과의 동맹은 궁극적으로 약소국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즉 약소국의 생존은 강대국의

21) 박용옥, (1977), “강대국 정치 속에서의 약소국 정치”, 『국제정치논집』 제17집, pp. 180~181

22) Stephen M. Walt, (1997),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21~26

23) Adrienne Armstrong, (198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Depen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5, No. 3, p.401

24) Neil R. Richardson, (1978),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penden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70.

힘에 의해서 항상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강대국의 임의적 조약파기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둘째, 두 강대국간의 조약의 희생물으로써 전략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하에서 동맹의 형성은 바로 비대칭적인 동맹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구조 하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공약을 보장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에 국가의 자율성을 위임하는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²⁵⁾

그러나 약소국의 능력이 강대국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강대국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 약소국이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고, 중요한 자원을 갖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약소국에게 안보위협요인이 되지만, 동시에 반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과거나 현재나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동시에 약소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따라서 약소국이 어느 강대국에게 자신의 신뢰를 주느냐는 일종의 외교정책 수단이다.²⁶⁾

즉, 약소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은 강대국 입장에서는 동맹국 선택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과의 동맹 체결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교적 기동성 발휘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외교적 기동성은 약소국의 근본적인 제약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제약을 능동적인 차원에서 극복하려는 개념으로, 즉 강대국의 입장에서가 아닌, 약소국의 입장에서 환경에서 오는 제약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⁷⁾ 약소국은 강대국이 필요한 동맹의 이익성을 가지고 강대국과의 동맹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안보환경 변화의 대응전략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5) 백성호, (2003), “강대국과 약소국간 안보동맹의 특성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9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pp. 227.

26) 상계서, pp. 529~530.

27) 이성훈, (2007),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

2)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의 시각차 고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간의 냉전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약소국과의 동맹을 맺고, 약소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의 지원과 보호 아래에서 국가발전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은 동맹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동맹의 목표와 범위, 동맹국 간의 역할과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각차는 동맹의 유지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의 시각차를 고찰하여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배제하고 외교적 기동성 차원에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전략 차원의 자주적 동맹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대국과 약소국은 동맹 목표의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의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은 초강대국에 의한 양극체제 하에서 대부분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 목표는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과의 동맹은 이러한 봉쇄정책의 지역적 제한성에 기인한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동맹이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보듯이 한국은 북한 위협의 저지,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이 1차적인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의 상이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 동맹 체결과 관련된 한미 간의 갈등이 야기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대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동맹의 유지와 결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약소국 입장에서는 강대국과의 동맹은 국가 생존전략으로 정책방향에 따라 쉽게 다른 동맹국(강대국)을 선택할 수 없다. 특히, 현대의 양극체제하의 동맹관계에서 다른 동맹국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적대국에 편승하는 동맹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현대의 국제질서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동맹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해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며 동맹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동맹 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연구하여야 할 핵심과제이다.

기존 동맹의 연구에서 이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자주성 등의 안보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논문에서는 국가 생존전략으로서 강대국과의 동맹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기동성에 주안을 둔 동맹정책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이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동맹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강대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자원을 고려하여 동맹국을 선택하므로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면에서 보더라도 동맹국으로 선택해야 할 주요한 핵심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소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은 동맹 형태의 시각차가 있다. 동맹의 형태를 양자동맹과 다자동맹으로 구분하다면, 강대국은 양자동맹 형태를 띤 다자동맹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1950년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 동일한 형태의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맹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거점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봉쇄선의 여러 국가 중 하나로 바라보기 때문에, 약소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동맹의 결속력과 동맹 유지에 대한 신뢰성 보다는 강대국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양자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국가가 주변의 위협을 억지하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동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맹국의 선택은 미국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양자동맹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것은 강대국의 강력한 힘의 원리에 의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강대국의 위성국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약소국의 동맹국(강대국)의 선택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28) 박용옥, (1977), “강대국 정치 속에서의 약소국 정치”, 『국제정치논집』 제17권, pp. 180~181.

또한, 약소국의 강대국과의 양자동맹의 형태는 냉전시대 미·소 양극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되어 왔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 속에서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었지만 9.11테러와 글로벌 경제 위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또 다른 양극체제의 예고 등 21세기 안보환경 변화는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 간의 양자동맹 형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의 변화와 경제성장, 군사적 위협 이외의 경제, 문화 등의 비군사적 위협의 인식이 커지면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모든 분야에서 지원되지 않음이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동맹의 범위 확대 및 재조정과 병행하여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조성도 미래 동맹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차는 동맹의 공식화의 문제이다. 즉, 동맹조약의 체결에 대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 동맹조약의 체결 여부를 가지고 공식적 동맹과 비공식적 동맹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공식화는 자국의 자율성의 제한과 연계될 수 있다.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동맹조약 체결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강대국의 동맹 목표와 정책이 동맹조약에 반영됨에 따라 동맹에 대한 역할부담을 요구받게 되고, 이러한 동맹의 수행정도와 수행의지에 따라 동맹의 신뢰도와 결속력을 평가 받게 되어 결국, 강대국의 정책결정의 변수로 작용되어 약소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약소국의 비대칭적·불평등 동맹의 문제점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으나, 약소국 입장에서는 동맹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의 공식화는 동맹의 신뢰와 확신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약소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공식화가 중요한 동맹의 선택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약소국의 동맹 목표는 강대국의 동맹목표에 비해 현실적이고 직접적 이다. 말하자면 한미동맹을 통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북한의 재침시 즉각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공식화함으로써 동맹의 기본적인 목표인 국가 안전보장과 동맹의 공식화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지력이 발생되고, 정책결정자는 강대국과의 동맹을 공식화함으로써 전략적 리더십의 산물로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분석

제1절 한미동맹의 형성과정과 특성 고찰

1) 한미동맹의 형성배경

한국전쟁의 휴전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3년간 지속되어온 전쟁에서 미국은 신속히 휴전을 성립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출혈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남북통일이 배제된 휴전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되었다. 더욱이 1953년에 이르러 휴전협상이 타결될 단계에 접어들다 국내에서는 휴전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정부는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분리시킬 준비를 할 것이며, 필요시 단독이라도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미국무부에 통보하였다.²⁹⁾

이승만 정부에게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은 국내정치적 지지와 전후 국내정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 1953년 4월 24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자, 한국에서는 휴전반대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계속되었고, 국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휴전반대 여론이 거셌다. 그로 인해 휴전반대와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의 타결 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종래의 휴전반대 태도를 바꾸어 휴전협정에 동의하되, 미국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³⁰⁾

이러한 휴전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의 갈등은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반공 포로 석방조치로 극에 달했다. 미국은 휴전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을 설득하고 향후에도 한국이 단독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

29)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 99.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한미 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100.

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휴전회담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은 조약문에 상호원조에 대한 의무와 함께 한국정부의 단독적인 전쟁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토록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이 독단적으로 전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치, 군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국내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1953년 1월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년도 대선당시부터 한국전쟁의 조기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휴전회담의 조기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군 단독 북진 가능성 언급, 반공포로 석방 조치 등은 이러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휴전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협의과정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반대를 해소하고 어떻게든 한국전쟁을 조속히 휴전시켜 국내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정치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³¹⁾

이상과 같이 한미동맹의 형성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²⁾. 먼저 한국측 입장에서 보면 첫째, 한국은 북한의 위협억지와 방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즉,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억지력과 군사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폐해진 국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지원이 필요했다. 셋째,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면서 국가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전력투구 하고자 했다. 넷째, 한국정치의 정통성 부족을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빌어 보충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은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때 강대국의 힘을 빌려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군사적 이유 이외에 국력 일반의 부족분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에서 동맹결성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첫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을 미국의 영향하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한국과의 동맹이 필요했다

31) 한배호, (1982),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의 협상과정”, 『군사』, 제4권, pp. 164~170.

32) 한용섭, (2003),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서울: 국방대학교, p. 5.

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막을 수 있었고, 한반도의 불안전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전략적 및 군사적 이유에서 미국은 싼 비용으로 최전선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우세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는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에 대해 공동방위 한다는 결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본문 제1조에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유엔헌장을 지지하며,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참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는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공격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화하고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있다. 제3조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대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군사동맹 관계를 선언함은 물론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4조는 미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구체적인 수단을 실체화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조약의 합법성과 어느 일방이 동 조약을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함을 선언하고 있다.³³⁾

2) 한미동맹의 특성 평가

가) 자주적 동맹

한국전쟁 직전 미국은 소련에 대한, 즉 소련이 사주하는 북한의 위협을 분석함에 있어서 군사적 위협보다 침투에 의한 내부전복을 더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수행방식에 있어 소련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이 공산주의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대할 때도 한국에게 경제 원조를 함으로서 한국 대내적 안보의 기반을 다지기로 한 것이다.³⁴⁾ 이러한 미국의 한반

33) 이선민, (2008),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25~26.

34) 이철순, (2000), “이승만정권기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

도 안보전략은 동맹을 통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한국의 대한 경제적 원조에 우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양극체제 하의 강대국 간의 패권주의와 세력균형의 수단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과 전략적 리더십이 발휘된 한국의 선택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진행될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결사반대하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미국이 압력과 설득을 되풀이하자 이승만은 휴전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의 재침시 미국이 다시 개입하여 한국을 돕겠다는 보장을 내용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작전(Ever ready Operation)’의 입안과 수행을 검토까지 하였다.³⁵⁾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전술까지 동원하는 등 탁월한 대미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미국과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³⁶⁾

이상과 같이 한미동맹은 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북한의 위협 억지 확보와 국가 경제발전이 절실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국가전략 아래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과 외교적 기동성이 발휘된 자주적 동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비대칭적 동맹

이렇게 형성된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적동맹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³⁷⁾

첫째,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태생적으로 동맹 상대인 미국이 광복 후 군정을 통해 한국군 창설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대한민국 건국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미국에게 생존을 위탁해야 했던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사학위 논문, pp. 168~172.

35) 김계동, (2000),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526~548.

36) 김종덕, (2008),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 18.

37) 이수형, (2000),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구조조정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0권 3호, p. 383.

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고, 정전협정 체결이후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군사동맹을 맺는데 있어서 상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배제된 위치에 있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둘째, 한미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엄청난 국력차이로 인해 역학관계 측면에서 비대칭적동맹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소련과 양극체제를 이루면서 세계의 정치·경제·군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소련이 붕괴된 탈냉전시대에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안보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정학적 차원에서 세계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매우 민감한 전략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은 생존과 안보를 국가이익의 최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는 반면, 대륙이 다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계전략에 바탕을 둔 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국간의 관계가 대칭적이고 수평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국가이익과 목표, 그리고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가이익과 전략적 목표의 우선순위를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대테러전쟁 등이 최우선적 관심사항이며, 이러한 안보정책은 외부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적 동맹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에 기인하여 한국은 일방적 군사적 지원과 경제원조를 통해 초창기에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전후복구 등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의 안보우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1960~1970년대 우위에 있던 북한 경제를 추월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38) 상계논문, P. 383.

제2절 한미상호방위조약 : 군사동맹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대별 진화과정

가) 형성기 : 1950년대

1950년대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궁극적 타협이 반복되는 특징을 지닌다.³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치열한 냉전 구도 하에 한국의 생존과 운명은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에 달려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다.⁴⁰⁾ 이러한 현실인식은 양국의 지도자로 하여금 상호의존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및 군사원조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 관계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전력으로서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의 형성은 세계 초강대국과 약소국 한국과의 동맹이었기에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동맹이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의 시각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의 이익은 공유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공유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유럽, 중동, 일본 등에 형성되어 있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을 치렀다는 면에서 중요하였지만, 한반도 안보의 중요도는 다른 유럽 등에 비해 중요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시 생존하는 것이 사활적 이익이었다. 한국의 생존이라는 사활적 이익이 미국에게는 지엽적인 것이었지만 미국의 공산주의 억제와 봉쇄정책에는 부합되는 것이었기에 한미동맹은 큰 변화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⁴¹⁾ 따라서, 한국의 사활적 이익과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상호이익성에 의해 한미동맹이 형성된 시기이다.

39) 김종덕, 전계논문, p. 22.

40) 김일영·조성렬, (2002), 『주한미군 역사쟁점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pp. 9~41.

41) 김종덕, 전계논문, p. 22.

나) 정착과 도전기 : 1960년~1970년대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체결된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한미관계는 ‘후견-피후견인’의 관계가 지속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제2공화국까지의 시기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와 냉전 대결구조에서의 상호 지원이라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반면,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갈등관계도 존재하는 협력과 갈등이 병존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 동안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안보,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받았으며 주한미군이 한국방위를 주도하였다.⁴²⁾

1961년 5월 군사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승공의 기치 아래 조속한 자립경제의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 하자, 박정희는 한미동맹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안을 지속적으로 존슨 행정부에 제시했다. 한국전쟁이 일본의 경제적 도약과 급속도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이 성사되었을 때 한국이 누리게 될 엄청난 베트남 특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이 한국의 안보·군사·외교·정치·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베트남전 참전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한국사회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 나아가 한미관계도 전반적으로 우호관계로 발전되었고,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미국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에 관한 논의를 중단시켰을 뿐 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로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원조의 규모도 대폭 가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는 한미동맹 관계가 가장 결속되었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는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비동맹운동이 강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한 반작

42) 김종덕, 전계논문, p. 23.

용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고,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및 군사경제원조가 확대되었으며, 한미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과 한미 행정협정 체결 등의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되었다.⁴³⁾

반면, 1970년대는 한국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과 지원을 포기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우려의 발단은 1968년 북한 공비들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프에블로호 납치사건이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화와 무력시위 압박을 구사하면서 프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에 노력을 경주했지만,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방위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군사원조의 증가, 작전권의 이양 및 북미 판문점 비밀회담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⁴⁴⁾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양국의 국방장관 수준에서 정책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매년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함으로써 한미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이어 안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앞으로 미국은 곤경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지원은 제공할지만, 전투병력은 파병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 방위의 아시아화’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은 닉슨의 주한 미군 철수 공백을 메우고자 자주 국방력 건설계획을 서둘렀으며, 미국의 방산기술 지원을 받아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개발을 통한 군사적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 한미관계는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포드 행정부의 강도 높은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77년 1월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⁴⁵⁾

한미동맹은 박정희의 핵개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게다가 1976년 11월 카터의 대통령 당선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예고했다. 카터는 북한이 침공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복장하는 주한미

43) 상계논문, p. 24.

44)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 166.

45) 김종덕, 전계논문, p. 25.

군의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는 또다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했으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 의회내의 한국안보 중시론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 결과 카터는 1979년 2월 “현지 정세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끝날 때 까지 주한미군의 철군계획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카터 행정부 시기의 한미동맹은 불화와 갈등의 연속이었다.⁴⁶⁾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은 군사동맹의 제도적 강화라는 결실로 나타난다. 카터 행정부의 철군에 대비하여 한미양국은 한미 연례안보회의와 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1978년에 발족시켰다. 한미 군사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즉,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한미양국의 군사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제도화 되었다.⁴⁷⁾

다) 발전과 변화기 : 1980년대

이 시기의 구분은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한국에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공고해졌으면서도,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반미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세력이 사라지게 되었다.⁴⁸⁾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다시 강화되었다. 국제적으로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1970년대 유지되었던 테탕트가 붕괴되고, 미국의 레이건이 소련에 압박정치를 펼치게 됨에 따라 동서진영간에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정권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였다.

1981년 취임한 레이건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전면 백지화하고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레이건은 1981년 2월 한미 정상회담에

46) 김성환, (1997), “한미 동맹체제의 구조와 기능: 과거, 현재, 미래”, 『외교안보연구』 제2권 5호,

47) 김종덕, 전개논문, p. 26.

48) 상계논문, p. 27.

서 전두환에게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미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레이건의 대소 강경정책으로 인해 한미 연합군의 대북 억지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레이건 집권기간 동안 미국은 무역수지적자 및 재정적자가 악화된 반면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어 가자 미국은 대한 안보지원정책에 대한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고르바췌프가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1980년 중반부터 한미 군사동맹관계도 전환기를 맞이했다. 1987년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판매차관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원국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새로운 안보동반자 관계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도 검토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988년 제2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연합방위증강 사업비로 4천 5백만 달러, 1990년에는 7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한국정부도 한미연합지휘체제 아래서 불평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체제도 기존의 불평등한 동맹에서 보다 평등한 동맹관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⁴⁹⁾

라) 새로운 동맹 모색기: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재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 4월 19일 미 국방부는 89년 4월 상원에서 통과된 ‘년·위너 수정안’에 따라 대통령 보고서인 일명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의회에 제출하였다.⁵⁰⁾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핵심은 80년대 이후 유럽을 능가하는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구소련에 의한 전통적 안보위협 감소, 국내 재정압박에 따른 국방예산의 대폭삭감 등의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주둔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49) 김종덕, 전계논문, p. 27~28.

50) 상계논문, p. 29.

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보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5년 2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 일명 신 아시아 태평양전략을 통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둔 미군을 적어도 20세기말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밝힘으로써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동아시아 전력구상은 한미 군사관계가 명실 공히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로 마련하였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국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고 우리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 판문점 공동구역 경비책임의 일부를 한국군에 이관, 한미 야전사 해체, 지상구성군사 분리 및 한국군 장성을 지상구성군사 사령관에 임명, 평시 작전통제권 회수 등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⁵¹⁾

2)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성과와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후 양국 정부 및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과 한미연합방위체계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미합의의사록과 한미주둔지지위협정(SOFA) 등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 협정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MC) 등의 안보협의체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본부 등 군사당국 및 실무 부서간에 전시비축물자, 미군장비 설치, 군사판매 및 기술지원, 작전·정보 협력, 시설 공동건설 및 운영 등의 실무협정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 능력 제고에도 기여하였다.⁵²⁾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안고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거

51) 김종덕, 전계논문, p. 29~30.

52) 온창일, (2000),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p. 136.

의 전면적인 위협세력이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한반도의 작은 국지적 위협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위협을 곧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의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대소봉쇄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은 북한이 공산주의 두 거대세력인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한다는 것은 곧 소련과 중국이 태평양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일본 방위도 위태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방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공산화가 다른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 도미노”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³⁾ 한국도 안보상의 위협인식을 단순히 북한에서 공산주의 전체로 확대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한국에게 주적은 북한이었지만,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남침을 자행했고, 공산주의체제를 지속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인식은 북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체제 전체에 대한 적대인식으로 확장되었다.⁵⁴⁾ 이와 같이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인식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무렵 대소 봉쇄정책을 추진하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국가들과 양자 및 집단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데 기초하여 체결한 동맹중 하나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과 같은 국망의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국가생존을 위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미국은 북한이 재침할 수 없도록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탄지경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⁵⁵⁾

한편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형성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한국 군사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293~382.

54) 김계동, 전계논문, p. 9.

55) 이상철, (2004),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연경문화사, pp. 108~117.

력중심의 힘의 불균형 상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은 아시아의 동구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고, 특히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군사력·경제력·인구·영토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소련·중국·북한의 공산주의 3국의 힘에 대적할 수준이 못되었다. 이와 같은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일본과 각각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이 지역에 개입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지원에 편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미국이 개입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던 한미 양국이 동맹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바로 공산주의 위협의 억제 및 확산 저지였다.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얻게 된 가장 큰 이익은 북한 공산주의 재침 억제 및 재침시 격퇴할 수 있는 강한 동맹국을 얻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게는 한반도는 공산주의를 확대하려는 세력을 저지시킨 곳이라는 점 외에 큰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으며, 한반도 안보는 유럽이나 중동지역 안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공산화 저지는 소련의 봉쇄와 공산주의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기본이익과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상호이익성의 공유가 한미동맹의 형성과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렇게 양국이 동맹관계 수립을 통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전세계 공산주의 팽창 봉쇄라는 공통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공통된 위협 외에도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이익도 추구할 수 있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건설을 위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으며,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해외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지는 양국의 이익은 한국으로는 북한의 남침억제 및 유사시 격퇴, 군사력 건설, 경제발전을 들 수 있고, 미국에는 소련의 팽창 저지, 해외 미군기지 확보 등으로 볼 수 있고, 공동의 이익으로는 공산주의 확산 및 팽창 봉쇄 등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한미동맹의 공동비전 : 포괄적 전략동맹

1)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초기에는 한미간의 동맹을 바라보는 한미간의 시각차에 의해 많은 갈등 속에서 이승만대통령의 외교적 기동성의 발휘로 형성되었고, 동맹 형성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국의 정책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교적 기동성과 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21세기 안보환경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와 미국의 단극체제의 국제질서 하에서 위협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등은 한미동맹의 재조정의 필요성 대두와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2009년 6월 16일 선언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이 지향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협의, 주한미군 재배치 합의 지속 이행,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 동맹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합의하였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범세계적인 안보위협과 문제에 대해 포괄적 협력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격상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미국이 현재 전쟁 중임을 고려할 때 자국 내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외적으로는 주요 관심사항인 전쟁 종결, 테러, 대량살상무기, 초국가적 범죄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한미 간 포괄적 안보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내용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노력 경주,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도입, 항공우주

및 원자력 분야 협력, 기후변화 협력 등 한미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공통분모를 확장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함으로써 ‘포괄적 동반자’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동맹을 넘어 군사와 비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동반자 관계로의 동맹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전략동맹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⁵⁶⁾ 첫째, 지난 10년간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한반도의 냉정구조 해체’를 표방하고 미국, 일본 및 한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해소하면 북한 스스로 핵무장을 풀고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는 발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냉전구조 해체를 표방하고 ‘이념과잉’과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는 좁은 사고틀에 갇혀서 기존 틀을 깨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우방국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틀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한국 외교가 북한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둘째, 비핵화의 기로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는 지연되고 핵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폐기,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라는 광범위한 접근 틀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셋째, 급변하는 전략 환경이다. 우리 외교가 북한문제에 얽매어 있는 동안 주변 전략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좁은 지정학적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걸친 매우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세계화에 여하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주요 문제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에서 상호 신뢰 확대 및 전략적 협력 확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56) 윤덕민, (2008),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 추진방향 : 글로벌 코리아 실용외교”,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안보·외교정책학술회의 발표논문, pp 2~3.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글로벌 외교를 대외정책의 기본가치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외교 역시 ‘이념을 넘어 실용’이라는 국정운영의 기본철학 속에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⁵⁷⁾ “첫째,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킨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한다. 셋째, 한국의 신장된 국가역량에 맞는 대외 기여외교를 펴나간다. 넷째,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다섯째, 한국을 매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문화교류를 강화한다.”이다.

정책과제에서 첫 번째로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발전을 언급하였다. 이는 국제적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 산업 국가들이 양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EU 및 중동국가들이 블록경제로 미국에 맞서고 있지만 미국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9.11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에 ‘군사혁신’ 및 ‘새로운 동맹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져온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기반 위에서 외교적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투명하게 밝혔다. 또한,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히면서, 한미관계 강화가 자칫 중국과 러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형성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미국방문시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의 모임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만찬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트플랜을 설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부를 수 있으며, 비전으로는 가치동맹, 신뢰 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바 있다.

57) 백승주, (2008), “한미 전략동맹과 한미방위협력 강화”, 평화재단 제22차 전문가 포럼, p. 9.

한미 전략동맹 3대 지향점은 한반도 주변 전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요인으로서는 가치·전략목표 공유, 동맹영역의 확대, 미사일 방어, 국민적 합의로 설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가치동맹,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의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신뢰동맹,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⁵⁸⁾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은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 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제시하였다. 가치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이익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신뢰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동맹 등 포괄적 분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양국동맹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안보 신뢰, 군사 투명성 제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을 만들자는 개념이다. 평화구축동맹은 한미동맹의 기후변화와 대 테러전, 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 신뢰 확대 및 전략적 협력 확장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2)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평가

2008년 이명박-부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진을 합의했고, 2009년 6월 1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10월 22일 제41차 SCM⁵⁹⁾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58) 윤덕민, 전계논문, pp. 5~6.

59)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duktive Meeting) : 1968년 1.21 사태 이후 그해 5월 워싱턴에서 최초 개최된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기구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위사조정 및 전달, 한미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발표하였다. 공동비전의 핵심은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008. 4. 19)에서 한미 동맹 복원을 위한 전략동맹 강화를 강조하였으나 이를 명문화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번 공동비전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이 완전히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고, 향후 동맹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⁶⁰⁾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의 목표를 한반도와 아·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는 것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목표를 가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하에 한미 양국이 협력의 범위를 군사 분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하고, 동맹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은 유사시 한국방위를 위해 한반도 핵우산은 물론 재래식 전력도 제공한다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재차 강조했으며,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북한의 오관 방지를 위해 대한 방위공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목표는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로서 한미양국은 21세기 안보환경 저해 요인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행위, 조직범죄, 기후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 전염병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라크와 아프간의 평화유지, 전후 안정화, 개발원조 등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가장 큰 성과는 대북 상황에 대한 한미 간의 공조로 볼 수 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의 갈등원인이 서로 다른 대북정책으로 인한 신뢰상실이었기에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정책 공조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60) 윤덕민, 전계논문, pp. 7~8.

제4장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방안

제1절 21세기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변화

1) 한반도 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전략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력구조의 측면에서 강대국간 역학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바, 근본적으로 중국은 향후 20~40년대 미국을 상대할 만큼 국력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강국인 일본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행동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존재 등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미·중 및 일·중간의 긴장관계, 북한과 미·일간의 적대관계 등 역사적 유산에서 비롯된 역내 국가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북아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중심은 유럽으로부터 아·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전략의 초점은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두고 있는 것이다.⁶¹⁾

또한 냉전종식 이후 세계는 진영 의식과 영토 단위의 국가 개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군사 중심에서 경제·기술 중심의 정보화와 지구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각종 국제기구, 테러집단 등 안보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테러리즘, 마약, 밀수, 해적행위, 환경파괴, 불법이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안보위협과 함께 기존의 방식·조직·사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비대칭 위협의 등장과 이에 대비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군사와 비군사가 복합화되는 등 안보위협의 성격과 질이 변화하고 있다.⁶²⁾

61) 이상철, (2003),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기원, 변화, 전망”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pp. 238~240.

이러한 점 등을 고려시 향후 동북아 지역에 형성될 수 있는 안보구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예측할 수 있다.⁶²⁾

첫째, 미국 우위적 다강체제다. 미국이 우월적 정치·군사적 위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 3국이 강화된 강대국 지위를 견지하는 체제로서 확실서이 가장 높은 안보구도에 해당한다. 즉 국제관계에서 패권지위 유지에 여전히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지도적 정치이념도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우위적 다강체제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 구도하에서는 미국이 작구의 세계전략과 정책 전개와 행동에 따라 세 강대국과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견제와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로 인해 계속적으로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에 미국 우위적 다강구조도 조만간 미국중심의 패권 대 중국 중심의 반패권의 양진영체제로 발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종 갈등사안은 고착되어 해결되기가 쉽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패권 대 반패권 양진영 체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와 문화적 역량을 결합해 미국 중심적 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체제로서 확실성은 낮으나 강대국들이 보이고 있는 세력균형이나 세력 안정화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동북아의 안보구도로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이다.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지역주도 경쟁에서 기선을 잡은 경우로서 이미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냉전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반패권 진영의 중심축이 냉전 당시에는 러시아였으나, 미국 중심의 패권지배에 도전하는 중국이 그 위치에 오름으로써 신냉전 양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 및 한반도 문제나 에너지 확보 문제 등 강대국간 갈등의 소지가 많아 불안정성이 사라지지 않고 자칫 무력갈등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재하지 못하므로 중국과의 지역주도 경합적 위치에 있는 일본은 기존의 대미동맹 연장 속에서 미국 패권을 지지하는 진영에 남을 것이다.

62) 이태윤, (2002), “탈냉전기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63) 전경만, (2005), “동북아 중장기 안보구도의 분석적 전망”, 『동북아 안보정세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 5~6.

셋째, 불균형적 다극체제다.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와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을 배경으로 하는 4국간 불균형적 다극체제로서 장기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안보구도의 유형이다. 이 다극적 안보구도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주의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또는 전략적 초점을 아태지역으로 택해 보다 확장된 지배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학적 이유로 견제와 경합의 지배논리만이 상존해 있는 동북아를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경우이나 상장 가능할 것이다. 이 구도하에서는 미국의 후퇴로 군사력과 경제력은 물론, 외교역량이나 문화·이념적 지도력이 서로 우위가 다른 주변 4국이 다극을 이룸으로써 어느 한 주변국이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20세기 초반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경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지만, 국가들의 국력수준 변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정책, 동북아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구도가 동북아에서 전개될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안보상화도 그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강대국은 핵보유 여부나 수준, 인구와 영토 규모, 문화적 지배력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극체제라 하더라도 실제 불균형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⁶⁴⁾

냉전시대 미국의 동맹정책은 공산주의 독재에 대한 거부감과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소련의 세력에 대항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미일안보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은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료되면서 미국은 동맹을 확장하여 전 지구적 개입을 유지하고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동맹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NATO 국가 외에 동유럽국가를 포함시켜 동맹의 범위를 유럽너머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⁶⁵⁾

그러나 2001년 발생한 9.11테러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은 미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동맹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전의 승리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지역강대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충돌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지역 강대국을 견제하는 동맹

64) 전경만, 상계논문, p. 7.

65) 박원근, (2006), “미국의 동맹선택”, 『주간 국방논단』, 제1125호, p. 2.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이 이라크로 확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방주의적 성향이 표출되어 여러 동맹국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테러에 대처했지만 때로는 독자행동도 불사하고 선제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일방주의적 입장에 독일과 프랑스 등 동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시 행정부의 동맹정책은 일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일방주의적 성향을 자제하고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폭정전’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첨부한 공동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전과 같이 미국의 안전에 반하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정책에서 일부 후퇴하여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동맹국과 우호국의 협조로 이루어가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QDR 2006에서 미국은 정적인 동맹에서부터 동반자 관계로의 변화, 미국의 독자적인 업무수행보다는 동반자들의 능력구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선언하였다.⁶⁶⁾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동맹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맹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주요동맹국을 거점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전과 같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한 동맹국이 자국 자산을 활용하여 공헌토록 만드는 ‘주고받는 식’의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동맹국간의 단순한 군사작전 협력을 넘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세계적 군사복합체제 혹은 군사동맹 네트워크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관련국과 주로 기지협정을 체결하여 세계 곳곳에 걸쳐 방대한 미국 기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전과 같이 단순한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가치의 공유보다는 미국과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주요 군사기지 제공 등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해 동맹국이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동맹을 쌍무형태로 맺는 것이

66) 박원곤, 전개논문, p. 3.

다. 미국이 시도한 대테러전은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지 못해 몇몇 국가와 임시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맺고 필요한 지원을 획득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공통된 안보위협을 공유하지 못한 기존의 동맹관계의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채우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맹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쌍무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NATO와 같은 다자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은 정책결정 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그 과정에서 미국에 반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고 크게 선호하지 않은 입장이다. 지난 이라크전쟁을 수행하면서 NATO를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은 공식협정을 맺은 동맹관계보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같은 비공식적 동맹관계를 통해 필요한 군사협력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동맹의 전력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동맹내에서 역할 분담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은 타격능력과 비정규전 대비라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비정규전의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대비는 하지만 실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타격위주로 수행하는 깨끗한 전쟁이다. 따라서 분쟁발생시 되도록 지상군의 동원은 해당지역 동맹국에게 맡기고 미국은 타격과 C4I지원 등에 전념하고자 하고 있다.

2)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가) 공통의 위협인식

새로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하게 포괄적 다중적인 복합동맹체제로 성장하려면 기존의 동맹이 동맹답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더 잘 갖춰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약화되고 있는 요소들은 미래 동맹의 결속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한다.⁶⁷⁾

동맹의 구성과 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국가이익의

67) 하영선 편, (2006),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p. 88.

존재이다. 동맹은 둘 이상의 국가들이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즉 공통의 국가이익이 있을때 성립한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그 상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동맹을 성립 유지시키는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단순한 안보상 국가이익의 교환이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동맹 이외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⁶⁸⁾

동맹을 일반 국제 협력관계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협력관계 이상의 결속을 보장해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맹 구성원들이 지닌 인식의 공통점이다. 공통의 국가이익에 성립된 동맹관계가 일반 국제 협력관계와는 달이 굳은 결속력을 지니려면 양국간에 폭넓은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동맹 구성원들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 즉 위협인식의 공통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협인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구성원들 각자의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맹체결 당시 공유했던 위협의 성격이나 수준에 대해 동맹국들이 점차 서로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경우 동맹국 간의 공조약화와 관계이완의 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장래는 지존 냉전동맹의 준립근거였던 북한의 위협을 복합동맹의 준립근거인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인식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면 21세기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작동할 것이다.⁶⁹⁾

나) 구성원간의 신뢰

동맹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위협인식과 국가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결속을 보장받기 어렵다. 위협인식과 국가이익 자체가 가변적인 것인 만큼 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동맹국 상대방을 배신하거나 동맹 구성원의 임무를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는 동맹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신뢰, 즉 동맹국이 자신과 같이 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앞서 제시한 동맹 구원들 간 공통의 위협

68) 김장흠, (2007), “한미동맹의 시대적 변천과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2.

69) 상계논문, p. 72.

인식은 평시나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평시에도 동맹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⁷⁰⁾

이에 비하여 동맹의 상대방이 유사시 나의 안전을 위해 국가역량을 동원해 줄 것이라는 굳은 신뢰는 시간이란 대내의 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해준다. 이러한 동맹의 특성은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강력한 결속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호불신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⁷¹⁾

다) 제도적 장치

동맹의 요건이 형성되고 나면 구성원들은 그 영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2개 이상의 국가들 간에 공통의 위협인식에 기반을 둔 안보상의 국가이익과 상호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면 동맹의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간 신뢰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한다.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의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대적 재해석이다. 한미양국의 정부 당국은 미일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 지향점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연합지휘관계는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정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분야 뿐 만 아니라, 경제·외교·문화 분야의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재구성 등 구체화 시행방안이 필요하다.⁷²⁾

라)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협력 강화

동맹이 일반적 국제우호와 협조관계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기본 목적이 동맹 구성원 중 일부 혹은 전부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군사협력과 연대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협력의 동맹이라고 해서 이러한 특성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경제 분야의

70) 상계서, p. 73.

71) 하영선, 전계서, pp. 91~94.

72) 김장흠, 전계논문, p. 73,

다각적 협력의 동시 확대, 발전으로 인해 동맹을 형성하는 국가간의 군사적 연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는 하지만, 군사요소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⁷³⁾

이러한 면에서 포괄적 협력이란 용어는 동맹국간의 군사적 공약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신뢰성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군사사적인 이익에만 중점을 둔 동맹은 파트너의 전략적 가치가 상실될 경우 와해 혹은 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반면 동맹을 형성하는 일방 혹은 쌍방이 상대방과 맺고 있는 정치 경제 혹은 기타 관계가 자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은 동맹의 파트너가 붕괴되거나 침략당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동맹 파트너 간의 군사공약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동맹관계의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의 형성에도 이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⁷⁴⁾

제2절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제언

포괄적 전략동맹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21세기 변화하는 안보환경속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하에 한미 양국간 공동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토의와 준비가 필요하며,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의 지지확보

동맹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1996년 미일동맹의 재정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상당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도 포괄적 전략동맹 전환과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

73) 김장흠, 전제논문, pp. 75,

74) 상계서, p. 76.

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왜 필요한지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양국 국민들에게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있어서 21세기 양국협력의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새로운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 기초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21세기 전략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⁷⁵⁾

2)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구체화방안 모색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구체화와 효용성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행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⁶⁾

첫째, 196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를 한미간 정치·안보협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의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할 군사중심의 한미동맹을 정치·군사 균형의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NATO의 집단안보의 제도적 구조도 민간분야와 군사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치이인 민간인 사무총장에 의해 지도되는 상설 사무처가 있고 국방장관 간 회담이 있다. 그리고 미일 양국간에도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있어 양국간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양국정부가 이해와 촉진을 돕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와 안보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겠다.

둘째, 한미 양국은 미일동맹의 발전을 주도했던 아미티지 보고서 및 와타나베 보고서와 같은 한미공동 연구결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의 형태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

75) 최승희, (2010), “미래 한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80.

76) 김승현, (2009), “한미동맹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2~45.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의 변화요구도 반영하면서 앞으로 남북한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과 연계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모든면에서 한미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셋째,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동맹 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미 양국 국민에게 홍보하는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보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용 대 효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계량화할 없는 것은 가중치를 주어서라고 분석해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담당 하려는 자주국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기여도,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던 대북한 억지력을 한국이 맡게될 경우,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내의 합의, 한미 양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정보작전능력의 배양, 과도기에 미국의 어떤 군사능력과 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정전체제, 군사적 대결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청사진을 공동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청사진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과 회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변화시키려면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인 북한의 군사위협을 감소시켜 나가야 하며, 북한의 군사위협 감소를 유도하려면 남북한과 미국 삼자간에 군비통제회담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 회담의 의제로는 군사적 신뢰구축 뿐 아니라 전방 배치된 공세 전력의 후방배치 문제를 포함한 군사훈련 규모의 제한과 공격무기들의 상호 감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북미간이나 남북한간에 평화선언이나 불가침보장 약속만으로도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상호 위협감소를 거쳐야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미간에 상호 신뢰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

국간의 지도층 인사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하며 한미동맹의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익이 됨을 지도층 인사들은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내 여론지도층, 주한미군 기지와 인근 한국군 기지 및 주민들과의 친선 모임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그 대처 방안을 둘러싼 한미양국 정부간의 의견차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국 지도자들은 협의를 진솔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범위와 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동맹이었고, 이러한 기본 목표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대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이 부각되고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⁷⁷⁾ 이러한 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당사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혹은 직면하게 될 안보위협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목표와 가치라고 할 것이다.

미래의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차원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간의 역할분담론, 즉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안보에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지역안보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지원역할을 수행한다는 구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타 안보위협이 부상하고 이와 관련한 한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정과 지역차원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는 검토

77) 최 강, (2005), “미래 한미동맹: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평화연구』, 제30권, pp. 78~80.

를 해 볼 필요가 있다.⁷⁸⁾

현재 상황 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인간안보, 무기밀매, 환경, 마약 등과 새로운 안보현안들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전쟁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이 협력 할 분야가 단순히 동북아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동맹간 협력의 범위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슈중심의 협력은 포괄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어떠한 문제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여나 협력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지리적 제한은 동맹관계의 발전과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4) 이윤창출 중심의 동맹관계 개선

그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는 근거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처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전략동맹이 갖는 현실적 역할은 위협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선 이윤창출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안정된 안보상황을 만들고 강화하면서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고, 지역안보의 안정성을 제고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안보구도에 대한 안정성, 예측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 비가시적 이윤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⁷⁹⁾

이윤창출중심의 포괄적 전략동맹은 단순히 상황이나 사건에 대응하는 대중적 접근이 아닌 예방중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분석 판단하여 마련된 예측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나가려는

78) 상계서, p. 78.

79) 상계서, p. 79.

예방적 접근을 중심으로 안보협력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상황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상황을 주고하고 만들어 가는 방향에서 동맹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할을 설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래 한미동맹의 핵심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는 행동지향적·이윤창출형 포괄적 전략동맹이어야 할 것이다.

5) 한국의 자율성 증진

한국은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을 통해 안보적 이익은 얻었으나, 한국이 선호하는 국내 혹은 외교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인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기존의 의무사항과 동맹으로 제한된 자율성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진 탈냉전 이후 한국과 같이 비대칭적 관계의 독일이 자율성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도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자율성 증진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 추구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의 경우 미국의 월등한 국력과 정치적 능력으로 인하여 한국이 군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동맹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력이 증진되고 한국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여도 자율성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된다. 한국의 국력이 증진된 후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 증액과 미국주도의 세계 전략에 참여하는 제한된 역할 분담 정도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도 안보전략의 효용성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⁸⁰⁾

80) 김승현, 전계논문, p. 49~50.

제5장 결 론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은 효용성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21세기 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국력신장은 21세기형 동맹으로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동맹의 변화요구는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정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양국이 함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헤어져도 무방한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동맹결속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 큰 쪽은 강대국인 미국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기 때문이다.⁸¹⁾

미래 한미동맹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전략적 비전이다. 현재 한미관계가 변환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전략비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한미양국은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활력의 재충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입각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⁸²⁾

과거 동맹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결성된 것이었다면, 미래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 구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의 실현에 대한 의지와 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양국은 21세기 안보상황과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테러·비확산 문제 등 미국의 안보전략에 이해하고 한국의 국력신장과 경제성장, 국제적 위상에 부합된 국외활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에 대한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하기 위한 복합적인 효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적 장치에 의한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81) 강봉구, (2006), “21세기 한미동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4호, p. 110.

82) 김장흠, 전개논문, p. 92.

또한, 동맹은 서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주는 상호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에 의한 다른 일방에 대한 강요는 동맹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여의 부분에 있어서 국력에 상응하는 부분을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공동의 위협과 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100%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효과적인 작전의 시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느 수준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지는 확인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할 부분과 독자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상호운용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신경계통은 통합성과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되 근육계통은 독자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의 특성을 체질적 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화 발전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군사동맹의 기초 아래 경제·외교·문화 분야의 협의체 구성과 정책발전을 위한 협의가 다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소국 한국의 동맹에 대한 인식변화이다. 약소국 동맹의 개념을 기존의 강대국의 일방적 편무적 지원 개념에서 벗어나 약소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동맹국 간의 역할분담의 개념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동맹 지속과 결속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미래 한미동맹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동맹의 효용성 증대와 제도화 발전을 위한 구체화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신곤. (2013). 동맹의 진화요인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논대학원
- 강봉구. (2006). 21세기 한미동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제4호.
-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서울:국방군사연구소
- 김계동. (2000). 한미동맹의 재조명 : 동맹이론의 분석틀로. 『한반도와 미국 -어제, 오늘, 내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 김계동. (2000).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일영·조성렬. (2002). 『주한미군 역사쟁점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 김승현. (2009).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 박용옥. (1977). 강대국정치 속에서의 약소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17권.
- 박원곤. (2006). 미국의 동맹선택. 『주간 국방논단』, 제1125호.
- 백성호. (2003). 강대국과 약소국간 안보동맹의 특성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9권.
- 서주석. (1996).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오승구. (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온창일. (2000).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이대우. (2009). 제자리 찾은 한미동맹. 『세종논평』, 제143호.
- 이상철. (2004).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서울: 연경문화사.
- 이석호. (1994). 약소국 외교정책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이선민. (2007).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이수형. (2000).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구조조정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0집 3호.

이태운. (2002). 탈냉전기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전경만. (2005). 『동북아 중장기 안보구도의 분석적 전망』. 서울: 국방연구원

최 강. (2005). 미래 한미동맹 :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평화 연구』, 제30집.

하영선 편. (2006).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한스 모젠소. 이호재·엄태암 역. (2014), 『국가간의 정치 1』. 경기: 김영사

한용섭. (2004).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서울: 국방대학교

2. 국외문헌

Adrienne Amstrong, (198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Depend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5, No. 3.

George Liska, (1962),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Neil R. Richardson, (1978),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penden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70.

Ole R. Holsti, (1973),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Rovert L. Rothstein, (1968), *Alliances and Small Pow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tephen M. Walt, (1997),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Proposal: Focused on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Kim, Kunh–Hong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history of South Korea, as referred to as ‘the history of the alliance’, South Korea by geopolitical particularity surrounded by mighty countries around has received a lot of threats. Historically, the threat of security of these neighboring countries has been selected the alliance at the national survival strategy to cope with the crisis situation of the state. Korea–US formed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of October 1953 alliance over the past 60 years, as an important strategy of national security to suppress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I went a role as a driving force of countries, such as democratization development success. These Korea–US alliance has been evaluated as an example of the most successful alliance, it is possible to be able to also continue developing future is an important issue of national strategy.

However, the Korea–US alliance is the 21st century, in December 1991, the change in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by the Cold War era of demise and 9.11

terrorism of 2001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China's economic injury international security change and empowerment of Korean national environment that sudden change, etc., such as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reat due to the increase of non-military threats, is requesting the development conversion of the Korea-US alliance. It was adopted in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 is,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it has a special meaning to the starting point to notice the development of future-oriented Korea-US alliance, the Korea-US military alliance such as economic, diplomatic and cultural, and agreed to the ongoing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including the multi-faceted field ,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erms of presenting the direction and goals to aim is the Korea-US alliance, it can be evaluated that it became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 development and South Korea strategic value of the Korea-US alliance.

In addition, geopolitical peculiarities and alliance of small and weak countries and powers, as seen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US alliance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 have the character of voluntary alliance by a person of weak countries . In other words, by geopolitical peculiarities of South Korea, in the only situation abide a lot of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e most effective and realistic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can Korea choose to, with the mighty country was alliance.

By weak countries alliance with powerful countries, has received ensure national security, it is limited to the autonomy of security to bear the cost of security based on the policy of weak countries mighty country as its consideration security dilemma has occurred, asymmetric powers and small country alliance so as to generate a parallax between each other, have also become cause of misunderstanding and distrust each other. Point of view to put the focus on point of view to see the alliance in the position of small and weak countries in alliance

dilemma and autonomy of problems such as weak countries of inequality, be a point of view of the level cor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enter and to force the mighty country can be, this is from the viewpoint of oriented development to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with the national interests, is an appropriate field of view.

Korea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lliance and should be continued in the future. Korea-US alliance was the Korean arbitrary choice for safe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Therefo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ynamics relationship ever-changing with the change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address these security environment, as weak countries Korean national strategy, comprehensive of the Korea-US alliance development in strategy alliance is a survival strategy of no choice but to select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there is a need to have a strategic flexibility due to the change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embody the interdependence share and South Korea leading to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based on trust it is necessary efforts to, such as Korea and the U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such as configu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nsultation body for the multi-faceted policy consultations, it is necessary to multilateral efforts, is embodied growth if you want to be.

【Key Words】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United State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 A Comprehensive Strategy Alliance, Reciprocity, Security Dilemma,